

공공부문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해 108개 공기업을 단계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정아래 각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고용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온 정부출연기관·출자기관·투자기관의 종사자와 종업원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와 시장논리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민영화 시책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국내외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 진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논의과정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을 점검해 보았다. - 편집자

- | | |
|-------------------------|----------------|
| I. 구조조정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 | 이성우 |
| II. 공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 강익구 |
| III. 남아프리카 공공부문 구조조정 논쟁 | 스테픈 리스, 콘라드 자딘 |



구조조정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는 오히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으로, 인원과 조직에 대대적인 감원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면서

지난 4월이래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주도 아래 강압과 일방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6월 초순 현재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설치근거법령을 일제히 폐지하는 대신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그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던 일련의 구조조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는 오히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으로, 인원과 조직의 대대적인 감원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혁신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고용불안'과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라는 이중의 문제를 낳고 있다.

백남기/유니스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60년대 후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범국가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국가혁신 및 연구개발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정부측의 분류에 따르면, 1998년 현재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포함하여 모두 34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1971년에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한 25개 연구기관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6개 정부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다. 1998년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은 18,000명 수준(예산상 정원임: 노조 추정 약 30%에 이르는 임시

직 제외)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모두 1조 1,436억원(총예산 2조 3,551억원)이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논의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나라 안팎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 시도, 1994년 일방적 민영화·통폐합 시도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가 있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정치 경제 논리에 따른 임기응변식 접근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연구환경을 훼손하고 정부출연연

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연구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우선 연구기관의 기능

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

임경영체제가 미비하

며, 연구조직의 유연성

이 부족하고 경쟁체제

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경우, 공급자 위주 운영

으로 정책개발능력이

떨어져 주무 부처의 정

책을 합리화하는데 미

물고 있으며, 경쟁 부재로 인한 연구경쟁력 저하와 조직·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민간의 특정분야 기술개발이 출연연구기관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과 연구인력의 유동성 저하로 연구성과의 확산이 어려워 개발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산업·학계·연구소 간 경쟁과 협조의 틀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한다는 원

칙 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급 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설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표이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

와는 달리, 정부출연연

구기관 종사자들은 연구

기관의 비효율과 연구생

산성 저하의 상당 부분

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

에 의한 경직되고 관료

화된 운영체제, 반복되

는 낙하산 인사와 기관

장의 독선과 전횡, 빈번

한 기관장 교체, 잦은 정

책의 변화 및 정책에 대

한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노조 참여 배제 등에서 기인하는 기관 운영의 민주화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도 각 연구기관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중복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의 엄정한 평가 관리를 통하여 오히려 경쟁에 의한 연구생산성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4.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의 시작

새 정부가 공언해 왔듯이 정부출연연구

연구기관의 비효율과 연구생산성 저하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의한 경직되고 관료화된 운영체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와 기관장의 독선과 전횡, 빈번한 기관장 교체, 잦은 정책의 변화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노조 참여 배제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바람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3월 하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던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인원이나 예산의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출연연구기관을 구조조정의 첫 대상으로 삼았다. 경영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전담 부서는 정부개혁실(실장 이계식)에 속한 행정개혁단(단장 김태겸)이었고,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인수)가 자문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4월초,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정부 각 부처로 시달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침 시행 후 불과 열흘 남짓한 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각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준비한 방안에 따라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이 단순히 통과외례에 불과함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의 내용은,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전제하에, ▷유사중복기능의 합리적 조정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혁

신, 조직과 인력의 감량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 도입, 계약용역 방식으로 지원방식 전환 ▷각종 규제 폐지 및 자율성 확대 ▷실적 평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영혁신지침의 내용은, 공통사항으로서 구조조정의 원칙을 ▶ 독립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 또는 폐지 ▶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out-sourcing) ▶ 기구와 인력의 연구기능 위주 편성 및 최소규모 조정,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 선임시 공정성 확보 ▶ 주무부처의 당연직 이사제도 등의 개선 ▶ 성과급에 기초한 연봉제 도입 ▶ 기관평가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노동조합의 초기 대응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위원장 고형곤)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로 조직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의 상급단체인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양경규)은 즉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관련 노동조합을 망라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98. 4. 8)를 내고



99년 5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재기노조 간부들의 구속감당결의.

국과학기술노동조합 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공식 출범 하였으며, 정부의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혁신 추진지침이 기능제정립, 기능조성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통합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노동조건 약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공공부문 개혁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도 4월 8일과 9일 양일간 간부수련회를 갖고 (가칭) 「출연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5일자 전체회의를 통하여 「출연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전

관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전국 27개 연구기관 지부를 중심으로 간부 야간농성, 조합원 총회 및 간담회, 각종 집회 등을 조직하여 투쟁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노조의 의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정책건의(1) - 정책대안에서 및 제도개선 요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정책건의(2) - 법·제도적 통제와 영향을 중심으로」 등의 정책자료들을 기획예산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제시하고, 노동조합의 발전적 대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4월 15일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주관 하에 광화문 집회

와 기획예산위원회 항의방문을 조직하여,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공청회에 노조 대표자를 참가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4월 22일 이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매주 수요일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선전전을 5월 하순까지 진행하였다.

4월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대하여, 정부가 각 연구기관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현장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갖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태세가 되어 있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조조정의 주된 내용이 여전히 타율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가는 것이라면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당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논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시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제1차 공청회”(4. 20)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위적 기준에 의한 통폐합은 피하면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1차 공청회를 거치며 논란을 거듭하던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2차 공청회”(5. 8)에서 마침내 정부 시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시안은 운영시스템 개선과 관리방식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으로는 ▷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를 구축하고 ▷ 민간경영개념을 도입하며 ▷ 개방형 연구시스템 구축과 ▷ 예산지원방식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항목 아래, ▶ 연봉계약제의 전면적 실시 ▶ 중립적인 비상설 평가기구 설립 ▶ 연구원장 공모 또는 추천제 ▶ 연구직 계약제 ▶ 연구기관 성격에 따른 출연금 차등지급 ▶ 연구기관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가 주된 내용이었고, 덧붙여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 '98예산 기준 경상경비의 20%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관리방식 개선방안은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이사회를 폐지하고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에 각각 2개와 3개씩의 연합이사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연합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연구원의 통폐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추후 연합이사회를 통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제2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토론자들은 이같은 정부시안에 대하여, 자율과 책임경영 방향과 어긋나며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무엇보다도 연합이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던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의 반대와 연구현장의 비판적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5월 13일 국무회의에 정부 시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 장기(5-10년) 계속지원 연구비 제도 확충 ▷ 기관장 직선제 ▷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경영참가 보장 ▷ 상호평가제 또는 상호평가제 ▷ 정책실명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특별법 제정 ▷ 이사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 상임감사제 폐지 ▷ 낙하산 인사의 중단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연합이사회에 대한 연구기관 통폐합 권한 부여 금지, 상임감사제 폐지, 낙하산 인사의 중단, 연봉계약제의 졸속 도입 재고 등 일

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7. 구조조정 표류하다: 부처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제2차 공청회를 전후하여 정부 시안인 각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알려지자 그동안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 중심의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연합이사회가 정부 시안대로 출범할 경우 부처 자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노동조합은 장기(5-10년) 계속지원 연구비 제도 확충, 기관장 직선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경영참가 보장, 상호평가제 또는 상호평가제, 정책실명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특별법 제정, 이사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상임감사제 폐지,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혁신보다는 부처이기주의에 매달려 기획예산위원회의 추진방향에 격렬히 반대했다. 연합이사회 출범에 따라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잃게 되는 다른 부처의 반발도 컸다. 또한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속하는 연합이사회 연구분야를 놓고 관련 연구기관들의 집요한 로비가 이어졌다. 출연금 중 기본연구비를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로 편성될 경우에 출연금의 지원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구기관의 소속 연합이사회(연구분야)를 바꾸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금부터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살리기 위하여 본격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개혁 조차 포기했다. 정부 각 부처와 연구기관 경영진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전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합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기존의 출연금 예산을 출연금(경상비 + 기본연구비)과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정책연구비를 관련 부처에 제상함으로써 각 부처의 반발을 무마하였다. 각 연구기관의 연구분야별 분류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이 구체화된 6월 초순까지 확정하지 못한 채 연구기관장들의 반발

과 읊소에 떠밀려가고 있다.

8. (가칭)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의 상당부분이 6월 초순에 흘러나온 이른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에 포함되었다. 법률안을 열람한 관계 전문가들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노동조합은 경악했다. 정부가 나열해 온 연구기관의 전문성, 객관성, 자율성, 책임경영 등의 미사여구는 온데 간데 없었다.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문구만 하나 걸어둔 채, 오로지

통제와 간섭,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의 내용에서 이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지는 실종해버렸다.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과학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의 연구회(연합이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장에게 인사·조직·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하고서도 사실상 연구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은 이미 연구회의 수중에

넘어갔다. 연구기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출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와 국가정책상 연구기관의 존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해산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구회는 연구분야별 연구기획 뿐만 아니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도 기획하고,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기관의 원장 또한 형식적인 공모 또는 추천 과정을 거쳐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후 원장이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경영목표에 대해서도 연구회가 승인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 등

이 모두 연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에서 앞서 정부가 일정하게 동의했던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사회제도 개선과 상임감사제 폐지에 관한 것이 그 중의 일부이다. 법률안 및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계의 3개 연구회에는 각각 10인의 이사 중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부처의 차관급 4인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감사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산을 편성·운영하

는 연구기관은 상근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예전처럼 감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구도를 합리화하고 그 법적인 뒷받침만을 하기 위한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9. 노동조합의 향후 대응과 전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은 정부가 인위적 통제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연구기관의 조직 및 예산의 축소와 인원감원을

**경영혁신 일정과 내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그나마 정부
각 부처간의 갈등과 연구현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오로지 관리통제 측면의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예산삭감, 형식적인 기관장 공모제 도입 등 경영혁신 일정과 내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그나마 정부 각 부처간의 갈등과 연구현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에 나타난 바로는,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진작부터 지적했거니와 연구기관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원들의 정서에 대한 배려도 없이 또다시 일회적이고 전시행정 위주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된 탓이다. 사실 처음부터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확립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제2차 공청회를 통하여 정부 스스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첫걸음으로서, 이후 있을 다른 공공부문 개혁, 나아가서는 금융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여타 국가적 개혁들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속셈만 있었을 뿐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며, 나아가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출연(연)의 인력 또는 조직을 감축하거나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학기술부 산하 각 연구기관에서는 4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났다. 단체교섭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임금 삭감을 기도하는 연구기관 사용자들의 공세가 벌써부터 거칠다.

따라서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투쟁역량을 결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으로서는 지금부터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살리기 위하여 본격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 5월 28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있었던 전국 과학기술노동조합의 “국가과학기술 장례식”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조가 연구기관 살리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의 자주적 생존권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